



1992년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美·北韓 核協商이 남긴 教訓



김태우
정치학박사, 핵문제전문가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꽃이라
고 할 수 있는 농축이나 재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
다. 세계정치의 東西構造에서 우
리의 혈맹이면서도 핵문제에 있
어서는 무시무시한 압력을 가해
온 미국, 이 미국의 패권주의적
핵정책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죽상을 채워왔다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국내에서도
농축이나 재처리산업의 경제성이

아직은 신통하지 못하다는 주장
을 펴면서 농축과 재처리시설의
非保有政策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痛恨의 나날들

그러나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원자력계 인사라면
이를 최선의 정책으로써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는 생
각하지 않는다. 특히 다분히 내셔

널리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자력과 핵문제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놓고 고민해 온 사람들에게는 「痛恨의 나날들」을 보내온 셈이다.

정치학자인 필자가 원자력인들과 조우하게 된 것은 하등에 이상 할 것이 없다. 걸어온 길이나 학문적 배경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있는 한 그려한 만남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과학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술인이나 공학도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야 알량한 논리나 개발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저들이야말로 국가의 동량이 아니겠는가」라는 일종의 존경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인 것이며, 筆者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원자력인들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技術接近論과 潛水論

원자력인들의 심심치 않은 주장을 중에서 사회과학도들을 안타깝게 하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핵문제를 왈가왈부 하는가, 핵문제는 기술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技術接近論」이며, 둘째는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추진하더라도 물밑으로 해야 한다」라는 「潛水論」의 주

장이다. 이 潛水論은 「농축이나 재처리라는 용어는 물론 核潛在力이니 核主權이니 하는 자극적 (?) 용어들을 사용할수록 미국의 견제가 심해져서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약소국의 논리에 불과하지만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이러한 주장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本稿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핵문제의 성격들을 규명해 보고, 특히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지켜보면서 느껴야 할 교훈들을 되씹어 보고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전망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일부 원자력인들이 주장하는 潛水論이나 技術接近論에 대한 반박논리를 개진하고자 한다.

筆者は 그동안 원자력연구소 등에서 순수과학도적 입장에서 많은 청사진들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의욕적인 기술개발계획이 중앙차원의 정책이나 계획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지었다가 부수는 모래성이 되어 왔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自壞感을 느껴왔다.

그러는 중에도 北韓의 핵사찰거부와 NPT탈퇴선언 등의 일련의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조국, 미·북한협상의 관람자에 불과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나라

도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써 하나의 견고한 세력축을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우리의 입장 을 강력하게 표명하며 북한과 국제사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비분을 느껴왔다.

지금 우리의 생존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족의 번영과 통일이라는 대과업을 성취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기술개발 의지가 해당기관 차원의 破片的 努力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하겠거니와, 그에 앞서 우리의 문제이자 국제적 문제인 한반도 핵문제를 다루는 국가적 차원의 大戰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백톤의 사용후연료를 수조에 담그어둔 채 재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통한의 기간」은 이제 마감되어야 마땅하다. 1991년 11월 8일 노태우정부가 수많은 과학자들의 청사진을 묵살하면서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앞으로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가 생각난다. 대다수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에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외마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다가 수난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적어도 그때 같은 의견을 가졌으면서도 단지 침묵으로 소극적 동의만을 표하고 침거하였던 사

미·북한 핵협상이 남긴 교훈

람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또다시 하나로 모아야 할 우리의 의지와 결의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서는 안될 것이라 믿는다. 모두 함께 美·北韓 핵협상의 교훈을 읊 미해 보고 「한국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편이 유익하지 않을까 싶다. 약소국 논리를 수용하면 할수록 상대의 강대국 논리가 더욱 빛을 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1라운드 協商·美國의 讓步

지난 6월 11일 제1단계 美·北韓 핵협상이 마감되었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북한의 NPT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방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웃어야 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찰일정 등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울어야 할지를 몰랐다. 북한이 「NPT 탈퇴 잠정유보」라는 어정쩡한 약속만을 내놓은 데 비해 미국은 사상 최초의 「核不使用」 약속(NSA)과 더불어 「武力不使用」을 합의해 주었다는 사실, 한국에게 防衛公約을 해 준 마당에 北韓에게 武力不使用을 약속한다는 것이 적이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 몇몇 유감스러운 변화에 대한 지적은 일단 덮어두자.

그렇더라도 결과만을 놓고 볼 때 美·北韓 협상 후 나온 공동 성명은 그 자체로 모호한 점이 많거니와 추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맹점들을 수두룩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눈에 띠는 문제점은 미국의 核不使用 약속이다. NPT체제라는 것이 기존의 핵국들의 핵보유는 허용하면서 새로운 핵 보유국의 탄생을 막는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非核國들의 불만이 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非核國들은 핵을 가지지 않는 대신 核國들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즉 Negative Assurance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미국 등 核國은 1968년에 안보리결의 255호를 통해 비핵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보호해 준다는 일종의 「核雨傘」 개념인 Positive Assurance를 표명했기 때문에 개별 非核國에 대한 Negative

Assurance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을 견지해 왔었다. 그러나 이는 불특정 다수의 非核國에 대한 의무차원의 선언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를 믿는 非核國은 없다. 때문에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이 사상 최초로 북한에 대해 사실상의 Negative Assurance를 약속한 것을 놓고 북한이 「획기적인 성과」로 선전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단서없는 核不使用 약속

둘째, 단서없이 核不使用 약속을 해준 것은 더욱 문제이며, 우리의 안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의 핵우산 개념하에서는 북한 등 외부세력의 대남 핵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 도래할 시 미국이 역시 핵위협을 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핵위협은 유사한 핵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核戰略의 상식이며, 수십년동안 미국과 소련사이의 핵전쟁 발발을 억지해 왔던 것도 바로 이러한 「恐怖의 均衡(Balance of Terror)」이었다는 데 이견을 제기 할 사람은 별로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핵불사용 약속은 적어도 「북한이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남위협이 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 핵우산 개념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논리를 담고 있는 공동 발표문을 보고 기뻐할 한국인은 없다. 이런 점에서 美·北韓 공동

1단계 미·북한 핵협상 주요내용

첫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는다.

셋째, 북한은 필요하다 인정하는 기간만큼 NPT탈퇴를 일시 정지 시킨다.

넷째, 상호 자주권을 인정하고 内政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발표 직후 우리의 외무부가 환영을 표시한 것은 의외이며, 이것이 미국의 행위라면 무조건 박수쳐 주는 우리 외교의 親美舊態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잘 되고 있으니 걱정말라」는 언질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셋째, 美國과 北韓의 협상이 핵 문제 이외의 보다 광범위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핵을 포함한 군사력의 사용금지」라는 부분은 그 표현대로라면 韓美相互防衛條約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대치하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해 한쪽에게는 방위공약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무역불사용을 약속한 것이라면 이는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여자에게 결혼을 약속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를 두고 논리적 모순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넷째, 북한의 NPT 완전복귀가 아닌 「탈퇴효력의 일시적 정지」라는 어찌쩡한 표현으로 성명이 마감된 점은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기에 충분하며, 더우기 그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이라는 단서를 붙힌 데 대해서는 미국이 자존심마저 버렸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북한이 원하기 만 하면 추후 언제든지 탈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NPT 제10조에 의해 회원국이 탈퇴를 통고하면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탈퇴가 확정되는데, 이번 성명

은 탈퇴확정 하루전에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추후 북한이 탈퇴를 선언하면 또 다시 90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만에 탈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모든 「칼자루」를 잡은 채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협상결과에 대해 우리가 만족할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후속협상에서 다루어 질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핵사찰 재개와 관련한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문서에 미국이 서명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美·北韓간의 북제 가능성

제1라운드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끝났을 때 필자의 머리를 스쳐 지난간 것이 있다면 美·北韓간 「북제」 가능성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내용들을 미국이 정말로 아무런 댓가없이 북한에 약속해 주었을까? 북한이 협상결과를 자신들의 위대한 외교업적이나 미국의 항복으로 선전하리라는 것을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을까? 한국의 외무부는 美·北협상의 내용이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라는 점을 몰라서 환영을 표시했다는 말인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게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대미 경고는 과연 사전조율 없이 가능했을까? 북한이

말하는 NPT 이외의 核保障 방법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미국이 부시대통령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테러시도를 문제삼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라크를 친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대한 국면이 도래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함이 아닌가? 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려 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아하,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사이에 핵문제 해결시나리오에 관한 목계가 있었고 한국에게도 언질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즉, 북한이 무언가 미국이 반길 방법들을 비밀리에 제시한 후 외형적으로는 미국이 양보를 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외교적 성과」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물론 그렇게 했다)라는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가상시나리오가 사실과 가깝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 한국 외무부가 미북협상에 대해 환영을 표시한 것은 사전에 양해된 일이기 때문이고, 김영삼 대통령이 對美경고를 발한 것은 미국의 양해하에 국내의 강경파들을 무마할 선제공격이 된다. 즉, 추후에 진행될지도 모를 남북한 핵협상에 대해 「不可論」을 외칠지

도 모르는 강경파들을 미리 안심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미국의 대북경고는 북한의 「오리발 내밀기」를 미리 봉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정 그러한 북계론이 사실이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북계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결국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協商戰術에 끌려다녔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 다시 반쪽만의 成功

유감스럽게도 필자로써는 후자 쪽이 진실에 가깝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으며, 7월 14일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2라운드 美·北 협상은 필자의 이러한 심정을 더욱 굳혀 주었다.

이번에도 북한은 사찰일정 합의가 아닌 「사찰을 받기 위한 협상」을 합의해 주는데 그쳤고, 경수로 기술이전 문제를 議題化함으로서 다음 협상에 대비한 「새지렛대 만들기」에 한치의 착오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의 특별사찰 요구를 察察의 公正性 시비로 되받아 치는 기민성을 과시했다. 즉, 미국이 경수로 건설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핵문제 해결을 자연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며, 특별사찰 협상에 관해서도 公正性 保障이라는 고리를 걸어 놓은 것이다. IAEA와의 협상재개를 약속하면서도 구

북한이 요구한 것은 팀 스피리트훈련 영구중지, 남한 내 미군기지 공개, 북한 사회주의체제 인정, 북한에 대한 核不使用 약속,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거 등 여섯가지이다.

북한이 요구한 것 중에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거는 북한 핵 문제보다는 더 큰 차원(예를 들어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세아 전략)에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카드용으로 제시한 것이지 결코 실질목표는 아니었을 것이다.

미군기지 공개도 여차피 남북한 상호사찰 과정에서 相互互惠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이며, 북한 스스로 핵의혹을 뿌리고 있음을 알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중단이 가능하리라고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은 자신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대부분 관철한 셈이다. 사상 유례없는 개별적 핵불사용 약속을 얻어냈고, 그들이 원했던 체제인정을 명문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것도 핵사찰 재개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것도 명문화시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무엇보다도 최강국인 미국과 맞붙어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북한의 승리라면 승리인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챙긴 것은 챙긴 것이고,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핵사찰에 응하겠다고 나을 것은 뻔한 일이고 보면 앞으로 북한이 무엇을 얼마나 더 챙기는가 하는 것을 두고 볼일이다.

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호사찰 협상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속력 있는 문구도 삽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곧 북한과 IAEA 간에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나, 북한이 버틸 여지는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대좌하면서 「原論 합의후 各論에서 뒤집기」나

「하나를 얻고난 후 요구조건 추가하기」 등을 수없이 경험해온 터라 놀랄일은 아니겠지만 北韓의 끈질김에는 또 한번 혀를 내둘러야 할 판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2라운드 협상을 「반쪽의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북한의 NPT이탈을 막았다는 이유 뿐이다.

美·北核協商의 教訓

적어도 현재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미국이 북한에게 끌려다닌 것으로, 그리고 한국은 늘 「뒷북」만을 쳐온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듯 싶다. 물론,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진실로 북한에게 해를 끼칠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간주하여 북한이 순순히 특별사찰을 포함한

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차례이다. 첫째, 미국과 협상을 벌이면서 북한은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격하시켰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의도적인 「한국 따돌리기」의 제물이 되었다는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협상결과를 3월 12일 이전과 비교하면 이 점은 매우 분명해진다.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해안전

식으로 NPT에 복귀하지도 않았고, 핵사찰 재개는 협상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특별사찰 얘기는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로 되었었다. 美·北협상 이후에도 북한은 사정거리 1,000Km 짜리 미사일을 실험발사했고, 핵문제를 논의하자면 만나지 않겠다면서 남북한 대화나 특사교환을 무산시켰다. 즉, 미국의 협상파트너로써의 북한의 지위는 격상되어 있는 것이다. 8월 17일 북한이 IAEA에게 협상을 재개했지만 신속한 결실이 예상되지 않은 평양에서 회의를 갖자고 하는 그들의 제의에서도 북한의 격상된 지위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남북한간 핵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과거에 우리가 요구하던 것들은 간데 없고 NPT 완전복귀, 상호사찰 협상재개 등을 새롭게 요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않는가? 우리의 協商位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정책당국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팀스피리트훈련 중인 한국군과 미군

국제사찰을 수용하고 남북한 상호사찰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놓고 볼 때 북한은 각종 核카드들을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美·北核協商을 정리하면서 결코 제3자가 되어서

조치협정하에 북한이 신고한 시설들에 대한 국제사찰이 진행되고 있었고, IAEA는 未申告 疑惑施設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연히 우리도 북한에게 특별사찰을 수락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오기를 한번 부린 후인 지금은 어떤가? 정

美國의 自國利己主義

미·북한의 協商을 지켜보면서 깨달아야 할 두번째의 教訓은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단 북한을 NPT울타리 내에 불들어 두기에 급급한 나머지 많은 것을 양보했으며, 우방인 한국의

安保利益과 自存心 損傷도 불사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NPT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비핵국들과 연장협상을 벌여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일단 북한을 NPT에 잔류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었음에는 분명하다.

핵강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국들을 영원히 비핵으로 불들어 두면서 자신들의 핵기득권을 계속 누리게 해주는 「보물단지」와도 같은 것이 NPT이다.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PT체제를 연장시키려 할 것이 뻔한 일이며, 북한을 NPT의 이단자로 내모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리 없는 것이다. NPT의 불평등성을 문제 삼으면서 1995년 평가회의시에 순순히 조약연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벼르는 비핵국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금방 수긍이 가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경수로건설 지원약속

두 차례의 협상에서 북한이 약속한 사항으로는 사찰수용을 위한 IAEA와의 협상재개, 9월 중순 까지 제3 라운드 美·北韓 협상 재개, 남북한 핵협상 용의표명 등이 고작이었다. 반면 미국은 전반적 美·北韓 관계개선을 위한 논의에 합의했고, 한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면서까지 무력불사용을 약속해 주었다. 특히, 제 2라운드 협상에서 경수로건설 지원을 약

속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우선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일단 북한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3월 12일상태로 되돌아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수로 문제를 새로운 요구조건으로 추가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수로 문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경수로는 상업용발전에는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한 최선의 원자로이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노령이며, 우리나라 경우 9기의 원전중 8기는 이 경수로형이다. 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흑연감속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제안한 것은 軍事的, 經濟的, 政治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핵개발의 혹을 줄이는 몸짓을 취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득하겠다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북한의 원자로로는 장기적인 원전개발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북한이 경수로 문제를 추가함으로서 대미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반대급부를 최대화 시키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데에서 이는 곧 정치적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급한 나머지 해주지 말아야 할 약속을 거른한 결과가 되었다. 미

국에는 전면 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핵기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핵확산방지법(NNPA)이 있고 재처리 등 민감시설을 보유하는 나라들과의 원자력 협력을 금하는 국내법들이 있다.

국내법상 할 수 없는 일들을 북한에게 약속해 줄 때에는 「여차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무방하다」는 식의 전제를 깔고 있었다고 보아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국익추구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으며, 그것의 내용이나 템포에 있어 우리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強硬策은 없다

두번째 교훈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公開核保有宣言 등 정말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물론 북한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리 없다) 미국이 북한에게 대해 군사 행동 등 초강경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군사행동은 우리민족 전체에게 엄청난 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리가 반겨서도 안된다.)

오히려, 북한이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반대급부들을 추구하더라도 NPT탈퇴를 선언하는 극단행동을 취하지 않고 軌道내에 남아 있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북한의 핵해결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선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북한이 협상을 기반하고 한미 양국이 공분을 느끼고 강경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최대의 조치는 외교적 또는 경제적 제재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가 북한에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 개문제로 치고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세번째의 교훈은 그것이 「우리」의 강경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번째의 미·북한 협상이 끝난 후 한승주 외무장관은 「이대로 북한이 핵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채찍밖에 없다」고 단

언하였으며, 디분히 민족주의적 접근을 원해왔던 한완상 부총리마저 「核解決 優先」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우리 정부의 결의는 자못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채찍이란 결국 미국이나 UN 등 국외세력에 의한 대북한 제재일 뿐이다. 이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며 외세에 의존하는 의타적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한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동안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협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연계정책을 고수했지만 이것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지렛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이나 일본

의 경제력이 북한에게 지렛대가 될지언정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에게 겁을 주는 요인은 되지 못했고, 우리의 연계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한국을 따돌리는 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도대체 미국과 북한이 벌이고 있는 핵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지렛대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이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질문이다.

迷宮속에 남을 北韓 核問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을 통해 반대급부를 얻는다면 그 댓가로 핵개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북한을 잘 모르는 순진무구에서 비롯된 생각 인지 모른다. 북한이 핵은 핵대로 확보하면서 곁으로 포기의 몸짓을 보이면서 반대급부를 추구하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국제사찰을 재개하고 특별 사찰을 수용하면 핵개발이 포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역시 순진한 기대일지 모른다. 우리가 미·북한 핵협상을 보면서 되새겨야 하는 다섯번째의 교훈은 북한의 핵문제는 통일의 그날까지 미궁상태로 남을 것이란 점이다.

물론 북한은 앞으로 진행될 IAEA와의 협상에서 한단계 한단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계를 진전시킬 때마다 온갖 생색을 내며 반대급부를 추구할 것이다. 임시사찰을 재개하는 문제에서 정규사찰의 실시나 특별사찰의 수용 등 북한이 걸고 넘어질 단계는 많으며, 남북한 핵협상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제사회 의 분위를 감안할 때 북한이 조만간 사찰을 수용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반대급부를 노릴 것은 분명하며, 카드용으로 제시했던 것을 다시 정식 목표로 격상시켜 주장할 가능성이나 나름대로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충할려고 들 가능성은 충분하다.

예를 들어보자면, 두차례에 걸쳐 핵불사용 약속을 받았지만 발표문(press statement) 정도의 격으로는 미흡하니까 격을 높혀 달라고 주문한다든지,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중단을 보장해 달라든지 하는 것들을 가정할 수가 있으며, 경수로 건설지원 문제는 북한의 핵카드로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북한이 국제사찰과 상호사찰을 수용하는 상황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核拋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같은 폐쇄사회에서 핵사찰은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숨겨놓은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찾아내는 신통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며, 궁

극적인 핵포기는 북한의 核動機消滅 여부에 달린 일인 것이다.

남한과의 국력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이상 군사 동맹국이 아닌 마당에서, 그리고 복잡한 내부사정 및 체제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마당에 북한의 核動機는 오히려 增大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핵사찰 여부로 북한의 핵포기를 단언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공개적인 핵보유가 물고 올 국제제재 때문에 약소국은 공개적인 핵보유를 택하기보다는 이스라엘식 불확실 전략을 택하기 마련인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후일 언젠가는 써먹을 북한판 NCND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판 NCND 가능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Taewoo Kim 「South Korea's Nuclear Dilemmas」, 『Korea and World Affairs』 1992년 여름호 참조)

훼손된 核主權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느껴야 할 점은 우리의 핵주권이 당치 않은 이유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핵주권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죄(?)로 核武裝論者로 오인받은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것이 당치않은 오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核主權의 참뜻을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을 듯 싶다.

6월 25일 원자력연구소가 주최

한 학술세미나에서 H교수는 核主權論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핵무기 개발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제재를 유발하는 등 국제정치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우리의 안보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농축, 재처리 등 예민한 기술의 확보는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남북한 평화공존이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제적 신뢰를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기술의 확보를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이 그가 주장하는 요지였던 것 같다.

그러나 核主權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반도 핵문제란 남북한 간의 문제,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문제,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간의 문제 등 여러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음은 누누히 지적한 바와 같다. 核主權論은 주로 한국과 국제사회간의 문제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다섯번째의 교훈으로는 우리의 한국과 國際社會간의 문제에 해당하는 우리의 核主權이 남북간의 문제와 연루되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 가슴아픈 일은 6공 제1기동안 정부가 핵주권의 손상을 회복하기보다는 변명하고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자

발적으로 남북한 문제와 연루시킨 대목이 없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11. 8선언으로 농축 및 재처리의 보유를 포기한 것을 놓고 「북한이 이러한 시설을 가지지 못하도록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먼저 포기하는 단안을 내린 것」으로 홍보를 했으나, 이로써 득하는 국익은 무엇이었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그러나, 사실상 농축 및 재처리의 포기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압박·피압박 관계에서 빚어진 사태이며 정부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문제를 연류시킨 것으로 보는 편이 더욱 진실에 가깝다. 재처리시설을 예로 들어보면 더욱 자명해진다.

북한이 가진 재처리시설도 사찰에 공개된 것이라면 우리가 폐쇄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핵위협이란 것은 위장되고 숨겨진 시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 시설이 사찰에 공개되면 그때부터는 군사적 전용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는 사찰을 받도록 요구할 일이며, 우리도 상응하는 시설을 가지는 명분으로 활용할 일이지 (그리고 이것이 민족적이자 미래지향적 선택이다) 폐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일은 아닌 것이다.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모든 비핵국들을 「가급적 완전히 발가벗기기」를 원하는 핵강국들의 폐권적 핵금정책에 장단을 맞춘 우리

核國들의 核主權

핵국들이 핵무기를 군사적 또는 정치·외교적 무기로 활용하면서 자주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힘의 차이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비핵국이 핵국의 핵주권을 탐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모하다.

非核國들의 核主權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평화적 핵이용권을 최대한 누리는 일본이나, 핵세계의 불평등성을 시비하면서 자국의 핵옵션을 정당화시켜놓고 있는 인도같은 나라들은 非核國의 核主權을 유지한 경우이다.

반대급부의 추구

한국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경제 등의 이유로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확보가 유보되는 등 평화적 핵이용권을 지키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평화적 핵이용권이 제약당하고 있다는 사실, 즉 북한의 핵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존의 세계 핵질서를 순응하면서 맞대응을 포기하고 經濟的·技術的 實利마저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심문 할

용한다면 교역 등 여타분야에서 반대급부를 추구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

요컨대, 세번째 부류의 核主權이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경제·기술적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두번째 부류의 핵주권도 쟁취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일 것이다.

필요성

정부정책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그것은 정책결정자들의 소임이나, 국가의 외교력을 높히고 향후정책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核主權論의 존재는 해롭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이 全無하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核主權論을 핵무장을 원하는 극우주의자들의 주장과 동일시하여 백안시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며, 한국에서 일고 있는 核主權論이 核武裝論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거 우리의 핵정책이 남북한문제만을 조명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핵문제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왔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 核主權 논쟁이다.

미·북한 핵협상이 남긴 교훈

의 「농축 재처리 포기」를 놓고 「救國의 決斷」으로 분칠한다면 이는 우스운 일이다. 왜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우리가 농축이나 재처리를 가지면 안되는 것인가? 핵무기 비보유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마당에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평화용 핵시설들마저 못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업보인가? 핵주권을 생각하면서 늘 자문해야 할 질문이다.

美·北 核協商과 統一問題

적어도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나쁜 쪽을 가정해야 할 이유는 많다. 이미 증명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기술, 70여 차례에 걸친 고풋실험, 「로동 1호」미사일의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드리는 것이 마땅할지 모른다. 핵사찰 역시 핵무기의 대량 생산을 억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개의 핵폭탄 제조를 막을 수는 없다. 김정일체제의 안정을 위한 수단 또는 최후의 체제유지 수단으로서 북한이 핵무기보유를 선호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졌다. 요컨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북한의 核拋棄를 인정할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갖고있지 못하다.

한국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국익을 앞세운 미국의 협상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반쪽만의 성공을 기록한 美·北韓 核協商을 바

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우선 넘어야할 개념의 장벽이 있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논리만이 정책결정자들의 사고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북한은 믿어서 안될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은 믿어야할 내 민족이니까 상대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첫째 논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連繫政策이라면 둘째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 소위 感想論的 민족주의가 아닌가 싶다. 즉, 「북한의 핵무기도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니까 환영해야 된다, 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식의 주장은 감상론적 민족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개의 논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제3의 논리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나 그렇다고 상대를 안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3의 논리하에 당장의 안보문제 및 민족동질성 양쪽 모두를 중시하는 개념을 정립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제3의 논리 위에 우리는 美·北韓 핵협상을 우리의 통일정책에 들키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核主權인 것이다.

첫째, 우리가 核解決이 되어야

대북교류를 본격화 시킨다고 할 때 이「核解決」의 정치적 정의를 내려야 할 이유가 있다. 어차피 통일의 그날까지는 완전한 해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치적 의미의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과 상호사찰을 받아들이는 시점을 핵해결로 간주하기로 했다면 (또는 달리 정의를 내려도 무방하다) 그 시점 이후에는 적어도 핵문제가 통일정책에 걸림돌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내리는 데 계을리 할 때 핵문제는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영원히 통일정책의 장애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은 절대없이 춤추어야 하는 운명이 될 것이다. 美·北韓 核協商에서 어떤 열매가 열리든 우리는 가차없이 그 열매를 따 먹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완상 부총리는 IAEA의 특별사찰이 이루어지면 경제인의 방북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북한과 경제협력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의 의견이 통일원 차원의 부분적 합의인지 아니면 정부 각부처의 공통된 합의인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최소한 통일원 차원의 정치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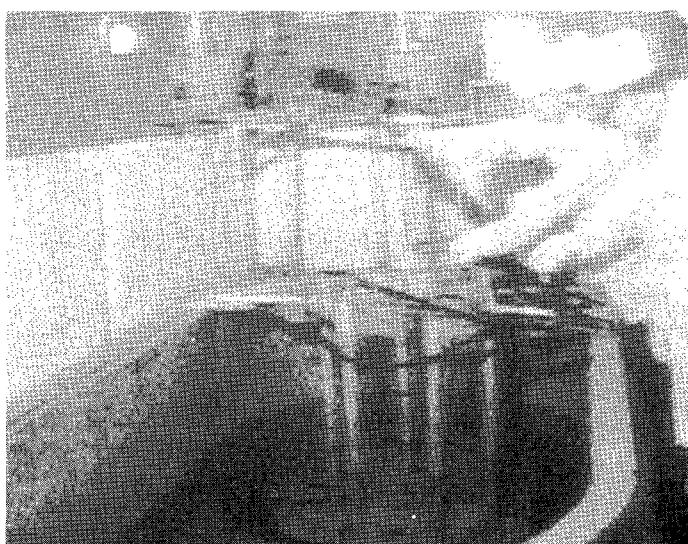
둘째, 추후 美·北韓 協商이 결렬되는 경우나 무한정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한 복안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시점이 되면 국제사회에 의한 대북제재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한반도에 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제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의한 대북제재만이 유일한「강경책」이라면 이 역시 곤란하다는 점이다.

핵을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북한을 코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의 지렛대는 전무한 채 민족의 미래를 남의 손에만 맡기는 것을 놓고 진정한 강경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대를 벗기지도 못할 바에야 「먼저 벗고 따

라 벗기만을 애원하는」식의 정책, 즉 내 민족의 장래보다는 핵강국과 주변국들의 구미에만 맞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남과 북이 사찰을 받으면서 나란히 원자력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같이 입기」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자력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통일후에도 周邊 核國들에게 둘러싸인 채 핵무기 없이 살아야 할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조치가 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농축과 재처리의 경제성을 시비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미북한협상이 잘 안풀리고 북한의 핵의혹이 심화된다면 이러한 「失敗」를 내것을 쟁기는 명분으로 가차없이 활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結 言



IAEA가 공개한 영변의 핵시설

이제 간접적이나마 몇가지 사항은 분명히 짚었다고 생각이 되어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적어도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원자력인들만이 핵문제를 논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안보문제이자 에너지문제로 통일문제이자 남북한문제인 핵문제, 한미간 문제이자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한 핵문제, 경제문제이자 정치·외교문제인 복잡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밀어주고 당겨주는 협력이 필요할 뿐인 것이다.

특히, 노태우정부가 수많은 과학자들의 꿈을 짓밟으면서 그리고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내다 버리면서 농축 및 재처리의 비보유를 선언했을 때 묵묵히 침묵을 지켰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무엇을 만회하는 기분으로 조국의 원자력선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앞으로도 계속 침묵을 지켜주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核主權問題

『潛水論』도 그렇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물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인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할 때이다. 농축 및 재처리의 비보유가 선언되었을 때 그것을 「북한 핵문제를 진화하기 위한 자주적 결단」이라고 홍보하고 다녔던 한 외교관이 생각난다. 그러나 核主權 논쟁이 한바탕 지난간 후 그의 말은 바뀌었다. 만약 우리가

미·북한 핵협상이 남긴 교훈

농축이나 재처리를 시도했다면 미국으로부터 세찬 무역압력을 받아 우리의 생존기반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라고 說得論理를 '바꾼 것이다.

「미국의 영향과는 무관한 자주적 결정이었다」라는 처음의 주장이 거짓임을 자인한 셈이다. 「우리가 농축이나 재처리시설의 보유를 추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질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평가가 가능하다. 작게는 한미관계 그리고 크게는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악화되는 것을 막 아주있기에 공로감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권국가가 당연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과장함으로써 국가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토론차원에서 볼 때 核主權論이나 反核主權論은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심사숙고하게 한다는 면에서 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결정자들 및 과학자들의 대다수가 잠수론을 신봉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이 나라의 핵정책은 敗北主義나 抛棄主義에 빠져들게 될 것이며 핵문제에 있어서 미래지향적 현실타파관 엄두내서는 안되는 것으로 오도될 것이다.

외교현실이란 명분하에 1970년



핵사찰 거부와 NPT탈퇴로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김일성 부자

대해 고쳐진 한미원자력협정을 1990년대에도 적합한 것으로 우긴다면 이야기로 누구를 위한 억지인지 모를 일이다. 많은 비핵국들이 NPT연장협상을 앞두고 자국이의 증진의 계기로 삼으려 벼르고 있는 이때, 우리도 이를 활용하여 왜곡된 한미 핵관계를 좀 더 평등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이 때, 내 정부가 앞장서서 NPT의 무기한 연장을 조건없이 지지해

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려 든다면 이야기로 누구를 위한 설득인지 모를일이다. 우리정부, 우리과학자, 우리국민 중 많은 사람이 잠수론을 신봉하고 약소국 논리를 수용할 때 우리를 다루는 강대국들은 신바람이 나서 압력Networking 기를 계속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순응논리만 있고 도전논리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나라를 외국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걱정스

립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희생한 현 상황에서 潛水論이란 당치않다.

核潛在力 論理

核潛在力 論理가 위험하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핵의 이중성을 생각해보자. 원자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敏感技術과 敏感物質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됨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원자력의 선진화나 핵잠재력이라는 말은 사실상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자가 원자력선진화로 표현하든, 정치학자가 핵잠재력이라고 표현하든 그것은 背景知識의 差異에서 오는 말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 왜 원자력선진화란 용어는 사용해도 괜찮고 핵잠재력이란 용어는 사용하면 죄가 되는지는 모를 일이다. 평화용 핵잠재력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된다면 미국은 일본이 핵잠재력이라는 불손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축이나 재처리시설의 보유를 허용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 여부는 결국 動機에 달린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經濟·技術的 이유를 앞세운 일본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일본이 사찰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유하는 시설들이라면 우리가 못 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받고 있는 대접이 얼마나 일본의 그것과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미없는 말장난에 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명백해질 것이다. 가정에 쓰이는 식칼은 누가 말을 하든 안하든 흉기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다 알지만, 악의 없는 가정 주부가 식칼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란 투명성을 보장하고 핵사찰을 준수하는 것 뿐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주적 외교자주적 원자력산업

이제는 「痛恨의 세월」을 마감하는 데 모두가 합심해야 할 때이다. 사찰을 받으면서도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위는 사찰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보유할 수 있는 지위로 격상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고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의 과잉시대가 예고되는 가운데 단 한톨의 플루토늄도 만지지 못하는 우리의 입지는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아무런 지렛대로 가지지 못한 채 미국과 국제사회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처지는 좀 더 나아져야 한다. 비단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국가적인 자존심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좀 더 대범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쑥대밭」 논리란 맹목적 친미주의자들의 保身논리이거나 미국의 압력이라면 무조건 수용하여 무능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자기정당화논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터이다.

核國들의 핵무기 보유를 합법화시키면서 非核國들에만 핵보유를 금하고 사찰의무를 부과하는 NPT의 不平等性을 문제삼아 많은 나라들이 조약의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그러면 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마저 족쇄를 채워온 미국의 처사에 우리의 많은 원자력 학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마당에, 核強國들이 원하는 대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이다.

金泳三정부가 진정 외국에 눈치볼 이유가 없는 떳떳한 정부라면 「한미관계의 평탄함」에 모든 것을 맞춘 구석기시대 核外交를 청산하는 것도 개혁의 일부로 생각해야 함이 당연하다. 朴正熙 대통령이 양성해놓은 核科學者들을 해산시키면서까지 미국의 지지획득에 급급했던 과거정부나 핵문제라면 「無所信 無哲學」으로 일관해온 전임정부와 같아서야 되겠는가? 核의 평화적 이용을 재천명하는 선언과 더불어 원자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망되는 때이다.